

총선 공천률·지도체제 격론 ‘野단법석’

비주류 의총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통합전대 개최 요구 주류 “혁신안 무력화·지분 나눠먹기식 지도부 교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가 내년 총선 공천률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측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상정하면서 공천률과 지도체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당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최규성 의원은 의총 발언에서 “사무총장을 2명이나 했는데, 미운 사람 빼는 것은 일도 아니고 시키고 싶은 사람을 넣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라며 “오픈프라이머리 없이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석현 국회의장이 전했다.

설훈 의원은 본인이 79명의 서명자 중

에 한 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으면 좋은 것인데 받지 않으면 괜히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내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안은 살인·절도·강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 전과자를 제외한 당원 누구나 총선 예비 후보 경선에 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공천배제하고 20%를 전라공천하는 혁신안의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때문에 문재인 대표 등 주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가 결국 공천 혁신안

무력화와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선출직공직자평가가 활동에 들어간 시점에 이제 와서 여당도 한 발 빼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매개로 한 공천률 갈등은 결국 지도체제 문제로 번지면서 내분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주류 측은 “문재인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며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지만 주류는 공천혁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한 공세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통합선대위 구성이나 통합전대 실시 주장에 대해서도 주류 측은 지분 나눠먹기를 위한 지도부 교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주류 문병호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에 나와 “당을 근본적으로 쇠신하려면 통합전대를 통해 지도부를 새로 뽑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친노나 당권과 내부에서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1월 통합전대를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당 수준의 통합 전대를 열어 전정배 전 장관, 손학규 전 대표 등 범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며 “(통합 전대가) 안되면 통합 선대위를 꾸려서 합의로 당내 권력을 분점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유성엽·황주홍·강동원·김승남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농어촌지역, 호남지역 지역구원 광주 서구를 출마시킬 나옴”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 “지도체제 개편” 文 “통합 노력”

박지원-문재인 전적 회동 문 “통합전대·선대위 검토” 구체적 시기 확답은 미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역 민심의 ‘탈당’ 요구까지 거론하며 조속한 지도체제 개편을 촉구, 문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동에서 통합전대 개최, 조기 선대위 구성, 문 대표의 거취 등 당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선대위 및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자주 기일이 연장돼 당내 불만이 고조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대표가 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탈당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전하며 개인적인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전략공천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광주 동구와 호남 농어촌 지역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 동료의원들과 대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가운데)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윤석(오른쪽 두번째) 등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문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당내 의견을) 외면하지 않고 당의 통합과 단결,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전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함에 따라 문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당내 관계자는 “지도체제 개편 이슈는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며 문제는

시기”라며 “주류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그들의 ‘공천 시스템’을 갖추려 할 것이며 비주류 진영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대위를 구성, 공천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겨누는 송영길

“유승민·정운찬에 구걸하는게 신당이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12일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 (창당) 동력도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광주시민은 경고와 심판의 의미로 천 의원을 당선시켜준 것이지 야당을 분열시키고 신당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애너지가 있으면 대야투쟁에 집중하고 당내개혁에 동참하는 게 낫지 불필요하게 정당을 만들어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내년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를 출마시킬 나옴”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 의원을 겨냥해 “당을 채울 인력이 없으니 조기 논리상 손을 벌리게 되고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정운찬 전 총리에 구걸하면서 무슨 신당이 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전 시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한



광복씨가 만든 정통민주당으로 인해 서울 일부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례를 소개하며 신당 출현에 따라 야권분열로 인한 야권의 총선 실패를 우려하기도 했다.

송 전 시장은 “천 의원 신당이 만들어지면 파급 효과가 생기고 수도권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동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과 광주를 놓고 내년 총선 출마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 오늘 ‘을(乙) 지키기위’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상설위원회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키는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12일 시당에 따르면 을지키는 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광산을 지역위원회에서 발대식을 연다.

발대식에는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권은희 을지키는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

한다. 발대식 후에는 ‘임대 아파트내 관리 등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임대료는 누구 몫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열린다.

우 위원장은 “을지로 위원회가 출범한지 30여개월간 전국 1000건 이상의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자동차 생산도시’ 지원 건의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2일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심판구 위원장 등 시당 당직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비예산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당은 8개 당협위원장이 서명한 건의문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을 향한 시민의 꿈과 희망”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하고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시당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선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오는 15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인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

/박지경기자 jkpark@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